

## 제290호 (2010. 12. 27)

---

### ■ 경제 동향

- 10월 국내 건설수주 59.6% 감소, 2010년 중 가장 급락

### ■ 정책 · 경영

- 부정당업자제재제도, 실효성 제고 절실
- 건설기능인력-현장 수요 반영한 산업 차원의 공급체계 구축해야

### ■ 정보 마당

- 일본의 공공공사 덤핑입찰 방지제도 개관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란 : 긍정의 마음이 모두를 변화시킨다

# 10월 국내 건설수주 59.6% 감소, 2010년 중 가장 급락

- 1~10월 누적 주택수주 9년만에 최저, 토목공종 대부분 감소 -

## ■ 토목과 주택 수주 부진, 공공과 민간 모두 급감

- 2010년 10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하였으며, 토목과 주택수주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59.6% 감소(전년 동월비)라는 2010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 공공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5.1% 감소한 1조 1,726억원으로, 2006년 8월(7,852억원)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임.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6.9% 급감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수주액 또한 2008년 1월(4,377억원) 이후 2년 10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5,115억원에 불과함.
  - 공공 건축수주 또한 주택수주의 부진(-91.1%)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한 8,050억원을 기록함.
- 민간수주는 토목과 주택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비 47.2% 감소한 3조 1,013억원을 기록
  - 민간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1.8% 감소하였으며, 건축수주 또한 주택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6% 감소함.
  - 민간 주택수주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시행에 의한 시공사 선정시기 변경(10월 1일)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급등해 3조 3,915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10월 시공사 선정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급감해 주택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59.8% 감소한 1조 3,442억원에 그침.

### <2010년 10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 10월	10,570.1	4,699.8	3,894.8	805.0	688.6	116.3	5,870.2	1,388.8	4,481.4	3,340.2	1,141.3
2010. 10월	4,273.9	1,172.6	511.5	661.1	61.1	600.0	3,101.3	531.2	2,570.1	1,344.2	1,226.0
증감률	-59.6	-75.1	-86.9	-17.9	-91.1	415.7	-47.2	-61.8	-42.6	-59.8	7.4
2009. 1~10월	74,785.5	40,491.6	30,579.5	9,912.0	5,722.1	4,189.9	34,294.0	7,072.3	27,221.7	18,074.2	9,147.4
2010. 1~10월	64,508.4	22,213.6	14,913.5	7,300.1	3,348.3	3,951.8	42,294.9	8,465.6	33,829.3	20,415.0	13,414.3
증감률	-13.7	-45.1	-51.2	-26.4	-41.5	-5.7	23.3	19.7	24.3	13.0	46.6

주 : 통계청 자료이며,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 2010년 1~10월 주택수주 누계치 작년보다 부진, 9년 만에 최저

- 건축수주의 2010년 1~10월 누적치를 살펴보면 주택과 기타 수주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들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10월 주택수주 누계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가 크게 위축된 작년보다 부진한 23조 7,633억원을 기록, 200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임.
  - 1~10월 사무실 및 점포와 공장 및 창고 수주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5%와 6.0% 증가함.
  - 관공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1.4% 급등한 5조 5,81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 토목공종 1~10월 누계치, 발전/송전 및 기계설치 제외하고 모두 감소

- 토목공종의 2010년 1~10월 누적치를 살펴보면,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를 제외한 모든 공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발전 및 송전과 기계설치 1~10월 누적치는 신울진 원전 수주의 영향과 경기회복에 의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8.0%와 15.7% 증가함.
  - 반면, 경기회복에 의한 재정 정상화의 영향으로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2%와 77.3% 감소함.
  - 치산치수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60.4% 감소한 1조 7548억원을 기록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주 발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토지조성 수주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4% 감소, 6년 만에 최저치인 2조 359억원을 기록함.

###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2010. 10월	1,405.2	795.9	326.7	575.4	128.0	200.3	36.8	7.5	131.4	12.2	572.0
증감률	-65.1	22.5	6.0	114.3	309.3	-77.1	-14.1	-99.7	-63.6	-90.5	-50.6
2010.1~10월	23,763.3	6,161.9	4,462.7	5,581.1	1,160.3	5,339.2	1,383.2	1,754.8	2,035.9	4,337.3	5,751.2
증감률	-0.1	16.3	79.6	41.4	-27.9	-55.2	-77.3	-60.4	-50.4	138.0	15.7

자료 : 통계청.

박철안(연구원 · igata99@cerik.re.kr)

## 부정당업자제재제도, 실효성 제고 절실

- 중복처벌 개선 및 제재수단 다양화 등이 효율적 -

### ■ 선택적 제재 사유 86%, 의무적 제재 사유 14.3%

-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제도임.
  - 최근 3년간(2007. 1~2010. 7) 시설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1,479건으로 전체 제재 처분(4,924건)의 30.0%이며, 제재 사유별 처분 현황은 총 4,924건의 제재 중 선택적 제재 사유가 85.7%(4,222건), 의무적 제재 사유는 14.3%(702건)를 차지

### ■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저하, 과잉처벌 소지 등 문제점 노정

-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징벌성으로, 대상 기업의 공공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해당 기업이 반발함으로써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저하
  - 제재 사유는 공공 계약 질서와 관련이 미흡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 또한 차이가 있음.
  - 다른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통보·게재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미흡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만 한정되어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에 대해서 과잉 처벌의 소지 존재
  -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과 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
- 운영상의 문제점
  -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기업 활동의 불안감을 증대

\* 예를 들어 뇌물 공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중복 부과

-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회생에는 신규 수주가 필수적이거나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 제재 중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건수가 약 55% 정도를 차지, 부도 업체의 회생을 차단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후, G2B에 게재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한 실정임.

## ■ 중복처벌 개선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필요

- 제재 원칙을 ‘징벌적’에서 ‘유도적’으로 전환하고, 입찰에 대한 제재 사유를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적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의 고유 강화 등을 통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 부정당업자 제재로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필요
  - 또한, 제재 사유 가운데 타 법률에서 처벌 후 제재를 내리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한 처벌로 단일화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 또는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재 사유를 계약 질서의 파괴 및 계약 불이행 등으로 한정하여 대폭 조정하고 제재 내용을 입찰참가 금지 외에 계약조건의 과중 부과, 입찰 서류 등의 추가 요구 등으로 다양화
- 제재 사유 발생 후 5~7년 동안 제재가 없는 경우,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제재처분시 효제도’의 도입 검토
  -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발주자의 공사수행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 선정 및 시공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면제하여 기업 회생에 협조
  - 제재 처분시 G2B에 제재 사실의 게재 시한을 제재 처분 개시일 7일 전까지로 법령에 명문화

강운산(연구위원 · wskang@cerik.re.kr)

\* ‘필수적 제한 사유’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을 공유하여 해당 업체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 ‘임의적 제한 사유’는 자체 기관(해당 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서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을 검토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되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건설기능인력-현장 수요 반영한 산업 차원의 공급체계 구축해야

- 건설기능인력 훈련 수요 분석과 공급방안 모색\* -

## ■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위해 산업 차원에서 훈련공급 체계 구축해야

- 건설기능인력 수급 불일치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 파악 ⇒ 훈련 수요 파악 ⇒ 공급 상황 파악 ⇒ 직종 조정·훈련 정원·훈련 내용 등에 대한 훈련계획 수립’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관심 밖에 놓인 비정규직이므로 산업 차원에서 훈련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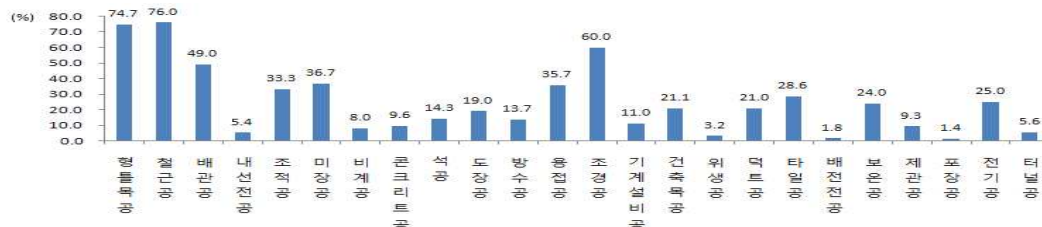
## ■ “형틀목공 양성훈련 필요” 71.2%, “철근공 향상훈련 필요” 76%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육성이 시급한 직종 설문조사>(2010년)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직종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건설업체수 ÷ 해당 직종에 응답한 전체 건설업체수 × 100”의 공식에 의해 훈련 수요 직종 파악

<직종별로 ‘양성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직종별로 ‘향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 \* 자세한 내용은 심규범·김지혜·김혜원(2010), 건설근로자 훈련 수요 분석 및 훈련 계획, 건설근로자공제회 참조

## ■ 현장성·전문성·공공성 고려한 지원 우선순위 배정 필요

- 특성별 훈련 공급 규모 추정
  - 직종별 훈련 공급 규모 : 향상훈련과 양성훈련 규모를 포함하면 형틀목공 5,187명, 철근공 2,457명, 매선전공 2,004명, 배관공 1,916명 등의 순임.
  - 숙련수준별 훈련 공급 규모 : 숙련인력 수요 초과 53,560명에 대해 외국인력 49,993명과 향상훈련 3,567명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함. 비숙련인력 수요 초과 42,975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22,975명과 양성훈련 20,000명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함.
- 지역별 훈련시설 배치 및 지원
  - 피라미드형으로 설계하여 기초 과정의 경우 기초 지자체 및 시·도 단위로 배치하되 자격 직종별로 약 15~20개소, 기능사 과정은 시·도 등 지자체 단위로 배치하되 자격 직종별로 10~16개소 정도, 산업기사 과정은 광역 단위로 배치하되 자격 직종별로 4~6개소 정도, 기능장 과정은 전국 단위로 배치하되 자격 직종별로 1개소 정도 마련
  - 숙련수준별·지역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 검토 : 현장성·전문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전문교육훈련기관 ⇒ 공공 교육훈련기관 ⇒ 일반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 민간 건설전문훈련기관 ⇒ 민간 일반훈련기관’ 순으로 지원

## ■ 산업 차원의 훈련공급 전담기구 설치해야

- 관련 당사자 입장에서의 훈련 활성화 방안
  - 근로자 및 훈련생 : 근로조건 개선, 직업전망의 제시, 훈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청년층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촉진(병역 대체, 입영 연기 등)
  - 사업주 : 초기업 단위의 훈련 체계 구축,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기능인력 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 훈련기관 : 훈련 비용 증액 및 구성 항목의 조정 필요, 훈련 재원의 연속성 제고, 훈련 시설 확충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 공급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직업 전망과 현장성을 결합하며 고용보험을 활용한 산업 차원의 재원 마련 필요

심규범(연구위원 · gbskim@cerik.re.kr)

## 일본의 공공공사 덤핑입찰 방지제도 개관

-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합입찰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정착 -

### ■ 건설시장 규모 축소

- 일본의 건설시장 규모는 1992년에 84.0조엔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1996년 이래 연속 14년 동안 축소 과정에 있음.
  - 2010년의 건설시장 규모는 39.3조엔으로 1992년 대비 53.2% 수준임.
- 2010년도 일본 정부의 건설투자는 13.8조엔으로 1995년 35.2조엔 수준의 40%에도 미달
  - 국가채무 증가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고, 공공발주 감소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덤핑입찰 방지 필요성 증대

- 입찰경쟁 활성화로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지명입찰에서 지명요건을 완화하자 대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덤핑입찰 문제 대두
  - 덤핑입찰로 품질 저하, 하도급업체에 부담전가,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 발생
- 일본 정부는 2000년 「계약입찰적정화법」을 제정하여 담합배제, 품질확보,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
  - 덤핑방지 관련 제도로 최저제한가격, 저입찰가격조사, 총합입찰평가제도 등이 있음.

### ■ 최저제한가격제도

- 적합한 계약이행을 위해 미리 최저제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하는 제도
  - 지방공공단체에만 인정된 제도로서, 동경도의 경우 건축공사 5억엔 미만, 토목공사 4억엔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함.
- 최저제한가격은 예정가격의 내역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
  - $(\text{직접공사비} \times 0.95 + \text{공통가설비} \times 0.9 + \text{현장관리비} \times 0.7 + \text{일반관리비} \times 0.3) \times 1.05$
  - 입찰가격이 최저제한가격에 집중됨에 따라 변별력 저하의 문제가 있음.



## ■ 저입찰가격조사제도

- 입찰가격 적정성을 조사해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저가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상위 제안자와 계약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가심의제도와 유사
  - 동경도의 경우, 건축공사 5억엔 이상, 토목공사 4억엔 이상 공사가 대상이 됨.
- 동경도의 특별중점 조사는 27개 항목, 통상조사는 16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특별중점조사는 입찰가격 각 내역이 예정가격 내역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하회하는 입찰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
  - ① 직접공사비  $\times 0.75$ , ② 공통가설비  $\times 0.7$ , ③ 현장관리비  $\times 0.6$ , ④ 일반관리비  $\times 0.3$

## ■ 총합입찰평가제도

- 현행 회계법령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격 이외의 요소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요소에 추가하여 입찰자를 선정
  - 가격 이외에 기술·성능 등의 조건을 포함해 입찰시켜,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 가격 이외 조건과 가격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 2005년부터 본격화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최적가치낙찰제와 유사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 발주자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자유재량으로 선택 가능
-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도출한 평가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치 = 기술평가점 / 입찰가격
  - 기술평가점은 제안내용에 따라 표준점수에 가산점 부여
- 정부의 발주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
  - 국토교통성 발주공사의 경우, 2003년 약 20% → 2005년 약 50% → 2009년 99.8%
  -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체의 적응력 한계로 적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2009년 57.5%),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

권오연(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20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정책과 주최 공사비절감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장철기 연구위원 참여</li> <li>도로 공사의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li> </ul>
12.22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시감독국 주최 부동산 PF동향에 대한 간담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최근 부동산 관련 PF 동향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li> </u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자문위원 전체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li> <li>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업무보고 및 향후 분과위 활동방향 등 논의</li> </ul>
	CM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국내외 건설시장 변화와 CM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li> <li>제1주제인 ‘2011년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발표 참여</li> </ul>
12.23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근로자 고용/복지실무협의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li> </ul>

## ■ 제50차 정기이사회 개최

- 연구원은 12.21(화),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연구원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연구원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음.
  - 내년도 사업목표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로 설정하고,
  - 핵심연구 분야로서 △시의성 있는 건설·주택시장 진단과 활성화 방안 제시, △건설시장 활성화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도 혁신방향 제시, △중장기적인 건설산업 수요 기반 확충 방안 제시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임.

## ■ 연구원 종무식 개최

- 연구원은 12.31(금) 오전 11시,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2010년도 종무식을 개최하고 2010년을 마무리할 예정임.
  - 이번 종무식에서는 우수 연구 결과물과 연구 및 사업성과가 뛰어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음.

## 긍정의 마음이 모두를 변화시킨다

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 건설인들의 기억 속에 긍정의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내년도 상황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심리학자인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가 공저한 <붓다 브레인>에 나오는 “부정적인 경험은 접착테이프처럼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은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밀어낸다”는 구절과 같이 부정적인 기억은 오래 남는 반면, 긍정적인 기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유전적으로도 인간의 뇌에는 부정적인 의식이 원초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는다.

왜 긍정의 경험을 간직하는 습관이 중요할까? 이는 인간의 마음과 뇌의 관계 때문이다. 마음이 뇌를 만들고 그 뇌는 다시 마음을 지배하고 만다. 마음과 뇌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이다.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뇌를 만들고 긍정의 뇌가 다시 긍정의 마음과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경과학은 “뇌는 평생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또한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신경 접속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부정적인 기억이 많아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점점 긍정적인 신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의 뇌는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로 구별된다.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긍정의 마음은 의식적인 뇌에만 작용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긍정의 경험을 떠올리고 마음을 일으키면 점점 무의식의 뇌에 작용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뇌 속에 구축된 긍정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 마음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전달된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에게도 긍정의 마음이 전달되어 가족과 직장 나아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미래 건설시장 환경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건설기업의 리더들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긍정의 경험들을 내면화시키고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변화가 직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 <건설경제, 2010년 12월 16일>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